

“SOC 조기 확충”...전남도, 민주당에 정책·예산지원 건의

11일 민주당-전남도,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전남 현안 논의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국립의대 설립, 당 차원 지원 요청

전남도는 11일 도청 왕인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호남권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확충 등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예산정책협의회에는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송갑석 최고위원, 김민석 정책위의장, 서삼석 예결위위원장 등 당 지도부 주요 인사를 비롯해 신정훈 도당위원장과 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했다.

이날 전남도는 민주당 지도부에 호남권 SOC 조기 확충 등 정책 건의 10건과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타당성 용역비 확보 등 12건의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먼저 교통지도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마중물이 될 '호남권 사회간접자본 조기 확충'의 시급성을 건의했다.

속도 무제한의 신개념 고속도로인 '광주~영암 아우토타반'과 목포~무안 남약~오룡을 잇는 '전남형 트램', 최근 예타 면제로 탄력을 받은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광주~고흥 고속도로' 등이 국가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순천·광양 일원에 590여만㎡(180만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지 조성도 반영될 수 있도록 주

가로 건의했다.

이는 전남지역 산업단지 부지 포화로 투자기업에 제공할 부지가 없어서다.

이차전지·수소 등 전남 미래 첨단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국가산단 추가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아울러 도민 생명권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국 최대 의료 취약지인 전남에 국립 의과대학이 반드시 신설되도록 전폭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전남도는 또 농수산업 1번지인 전남으로 농업·수협중앙회가 이전에 농수산업 첨단산업화를 견인하도록 정부의 '산업은행법' 개정과 연계해 '농·수협법' 개정안도 동반 통과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이 외에도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지방소멸 위험 지역 기회 발전 특구 조세특례 도입, 해상풍력 특별법 신속 제정·지자체 역할 강화 등을 건의했다.

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광주·전남 첨단 의료복합단지 조성, 국립 심뇌혈관연구소 설립,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인 여수 국동항 건설·광양 공업용수도(IV), 향토음식 진흥센터 설립,



11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2023 더불어민주당-전라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여한 전남도청 직원들과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생태 모델화 사업, 정원문화산업 핵심 거점 육성, 광양 세풍산단 2단계 내부 간선도로 개설 등 현안 사업이 증액되도록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록 지사는 "정부 긴축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

입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전남 대도약을 위한 다양한 신규사업을 비롯한 8조6000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협의회 논의 사업이 전남 대도약을 위한 커다란 기폭제가 되도록 당 차원의 특단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광

온 원내대표는 "전남도에서 건의한 당면 과제에 대해 당 차원의 지원방안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피겠다"며 "대도약, 전남 행복 시대 실현을 위해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민주 “검찰 추가 소환 부당하지만 이재명 대표 12일 검찰 출석”

민주 ‘검찰권 남용하면 모든 권한 사용해 대응’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추가 소환 일정이 12일 오후 1시30분으로 확정됐다. 권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당 대표는 오는 12일 오후 검찰에 한 번 더 출석한다”며 “검찰의 부당한 추가소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12일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이

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이번 조사마저 무도하게 조작하는 등 검찰권을 남용할 경우,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사용해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는 단식 10일째인 이 대표 건강상 이유로 8시간 만에 조기 중단됐다. 검찰은 예정했던 조사를 마치지 못했다며 나머지 조사를 위해 12일 오전 10시30분 출석을 통보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재소환 일정과 관련 “검찰과 협의해 결정했다”고 전했다.

검찰권 남용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 조치에 대해서는 “조사 방식이나 내용을 보고 전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수사팀에 대한 사법적 대응도 포함할 것이다”고 말했다.

오유나기자

전남도의회, 수산업 위기 대응 방안 모색

전라남도의회 수산정책발전연구회(대표의원 최동익)는 지난 9월 7일, 수산업 위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수시를 찾아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행정기관, 전문가와 어업인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수산현안인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 재해 대응과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업 피해 대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첫 번째 주제는 ‘전남도 연안재해 대응 방안 마련’으로 기후변화 등에 인한 해수는 상승으로 자연재해에 취약한 연안지역 도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변화되는 연안 환경을 살피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전라남도는 전국 해안선의 45%, 섬의 65%를 차지하는 등 연안지역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면서 “연안 공간의 대부분

을 차지하는 어촌지역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취약계층의 피해가 크게 나타날 수 있어 자연재해에 안전한 연안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전남도의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일본 원전 오염수 수산업 피해 대응 방안 마련’이란 주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양식어업, 어선어업, 수산물 유통 등의 분야별 수산업 종사자들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전라남도의회 차원에서 노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수산정책발전연구회는 전남도의 수산정책개발과 임법 활동을 위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동익 의원을 대표로 박성재(해남2), 강정일(광양2), 신의준(완도2), 최병용(여수5), 최무경(여수4), 정길수(무안1), 전서현(비례), 장은영(비례), 모정환(함평)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